

경제의 빨간불, 무역적자 누증

교수논단 무역수지 100억불 적자충격과 대응자세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급변도 무역수지적자가 8월23일 현재 무려 98억불(수출 427억불, 수입 525억불)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매년 같은 기간중 사상 최대금액으로, 추후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나라의 경제가 건실하면 나라안으로는 저축과 투자가, 나라밖으로는 수출과 수입이 대략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매우 나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원인은 89년 이후 수출증가율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수입증가율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기업가들의 윤리의식의 부재, 일반 소비자들의 이기심과 파소비 풍조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II. 360도 회전한 무역수지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의 변동을 그래프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매우 깊은 교훈을 준다. (표 참조)

제1기는, 해방이후 1950년대까지 원조무역기로서, 연간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을 넘었었지만, 아직도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낸 기간이다. (2사분면) 5차에 걸친 경제계획과 공업화에 따른 무역전략은 매년 경제성장

률을 연평균 9% 이상을 높였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80년대초 중화항공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무리한 투자는 외채위기를 낳는 위험을 가져오기도 했던 시기였다. 제3기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무역수지흑자기로서,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넘어 해방이후 주체적으로 최초의 무역수지와 국제수지의 흑자를 기록한 기간이다. (1사분면)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정책과 기업과 국민의 끈질긴 노력과 근면성이 이루어 낸 결과였다. 특히 3저효과(저유가, 저금리, 원화저평가)와 국제무역환경이 호전된 데서 상대적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던 시기였다.

제4기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수입급증기로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다시 넘고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기간이다. (제4사분면→3사분면) 1989년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서 약간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90년과 91년 8월까지 다시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는 기간이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내수경기의 활성화가 오히려 수입을 급증시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관계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앞으로 몇년간 매년 1백억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점이다.

III. 무역수지적자의 요인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누증의 요인은 결국 수출이 격감하고 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이 극히 둔화되고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코스트가 1986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어, 88년부터 한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54불인데 대만은 643불, 홍콩은 567불로 우리나라는 저임금 국가라는 명을 벗은 반면 임금경쟁력은 열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 고임금, 고금리, 원화고평가는 3고효과(3高效果)를 가져와 수출 가격경쟁력을 급격히 낮추고 있다.

둘째로, 수출의 비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R&D 투자가 선진 또는 경쟁국과 대비할 때 매우

고임금 고금리 원화고평가, 수출경쟁력 약화요인 자동화기계 농산물 수입누적...적자폭 넓혀

기업이 벌려 쓴 돈에 대한 이자율이 일본보다 약 2.5배, 대만보다 1.5배정도 높고, 우리 기업의 타인자본과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율이 높으니 이자율의 경쟁력은 열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환율은 달러기준으로 86년부터 89년까지 일본보다 2배가 평가절상되었으니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이와같

우 낮다. 품질의 불량품 판정비율은 높은 반면, 아파트 서비스는 부실한 편으로 나타나 있다. 더욱 최근 무역수지가 크게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수입이 급증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입상품별로는 자본재, 건축재, 소비재등의 증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급변 상반기

일까지 농협중앙회홍보실로 제출하면 된다. 논문제출시에는 연락처와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해야 하며 당선자는 10월 10일 농민신문에 게재된다.

최우수작 1편(상금 300만원, 상패) 우수작 2편(상금 100만원, 상패)佳作 5편(상금 50만원, 상패)을 뽑는 이번 공모의 시상식은 10월하순에 있을 예정이다. <문의: 737-0021~9, 교환 7741>

‘동북아 안보환경’ 세미나
오늘 10시 힐튼호텔서 열려
‘90년대의 동북아 안보환경’의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9월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주관이며 영국 뉴캐슬대학의 드래프트교수 발표로 토론이 진행된다.

‘동북아 특강’ 개최
6일, 본관4층 세미나실
공교대사가 본 남북통일의 현실과 전망이란 주제의 제3회 동북아 특강이 오는 9월6일 오후 2시부터 본관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강의 주관은 동북아 연구원이고, 14년동안 북한에 거주했던 P.U공교대사의 발표로 특강이 열린다.

중 기계류 수입은 98억불로서 작년 동기보다 32%나 증가했다. 각 기업주들은 인건비상승과 노사대립증대를 기회로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나 기술자본집약상품의 생산을 위한 대체와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상품의 생산까지도 기계로 바꾸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가 생산자동화를 위한 기계류수입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건축관련제품의 수입도 31억불로 39% 늘어났고, 항공의 수입도 10억불로 200%가 증가되었다. 특히 소비재인 농축산물의 수입은 3억불까지 들어와 「마나

나 파종」까지 겪었다. 이와같은 수입은 정부의 내수경기부양책으로 내수용수입이 전체수입에서 69%를 차지해 89년의 63%, 90년의 67%보다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잘 나타난다. 둘째로, 지역별로는 대일무역수지 적자액이 누증되어 있고 과거 대미무역수지흑자가 적자로 반전되어 가는데 문제점이 있다. 지난 7월까지 대일무역수지적자는 약 55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대미무역수지적자는 약 10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심각하다. 셋째로, 정책적으로 수입자유화 폭목이 증대되고, 관세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국제화, 개방화,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품, 자본, 외환의 자유화는 필요조건일 수 밖에 없으나, 최근 불요불급한 호화성사저품, 열대성 과일, 건축자재, 지나친 해외여행 등에 따른 수입과 남용은 경제는 용기술의 미숙에서 오는 결과로 보여져 시급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IV. 자기반성과 새로운 경제의지의 결단

결국 최근의 무역수지적자 100억불의 충격을 완화하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도자, 기업주, 개인들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정책의 뚜렷한 첫번째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1960년대는 정부가 내년도 정부지출은 약 30%나 증액시킬때 국민의 소비절약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실시되어 정부가 개입하기는 힘든 형편이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소 인상되어야 한다.

기업주는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단기적인 이익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외채상환수입에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 노사대립에 저지쳐 생산활동을 기피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이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각자가 가장 크게 병들어 있는 것은 파소비풍조이며, 외채상환의 선호사상이다. 외채자본과, 외채자본제품, 외채건축자재, 양담배, 열대과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자체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경제가 수출부진이 구조적으로 경직되고, 내수과열에 의한 수입증가가 지속된다면 1980년대의 외채위기를 다시 맞을수도 있으므로 이 기회에 정



◇ 정부의 건축재정 정책, 기업주의

장기적인 기술개발, 파소비 풍조 극복만이

구조적 수출부진과 내수과열을 막을 수 있다

와 70년대는 ‘수출제일’이었고, 1980년대는 ‘물가안정’이었다. 국민의 의지가 집약될 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경제행위는 국민에게 교본이 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소비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

부, 기업, 가계는 혼연일체가 되어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절제하는데 새로운 경제의지의 결단이 요구된다.

서 청 석

(경정대 교수·무역학)

학술정보

건전관광 수필공모전 30일까지 관공사에 제출

올바른 관광의식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4회 건전관광 수필공모전’이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실시된다.

이번공모전에서 수필은 원고지 25매 분량으로 A4용지인 1매만 국내·외 여행경험 건전한 관광을 유도할수 있는 내용 스핀락을 통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민족, 전통문화의 예찬등을 소재로 하여 9월9일부터 30일까지 한

국관광공사 국민관광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757-6030 구내 464, 465, 466>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전 ‘동춘현실’ 주제로 7일까지

농촌의 현실에 대해 농민과 학생이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현상 공모전’이 농협 주관으로 개최된다.

논문은 원고지 80매분량으로 △농산물 시장개발과 한국농업의 대응전략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방안 △지반화시대의 농업역할 △농업의 농산물 가공산업 참여방안의 논제중 택일하여 오는 7

미포만의 해방전사 ‘골리앗’



지난해 이 땅의 노동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현대중공업노조의 골리앗 농성을 모두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골리앗농성 해제 1년3개월만인 지난 28일, 울산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소식이 또다시 우리들의 귀를 울렸다.

노조측은 지난 2달여동안 회사측과 임금인상안, 해고자 복직문제 등을 놓고 협상에 왔으나, 개버릇 남 못준다고 회사측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리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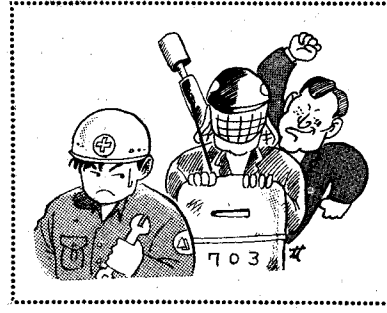
‘누가라고 아웅’하듯이 회사측은 계열사 최고수준의 임금인상액을 제시하면서도 해고자복직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자체를 거부하다가 파업직전에 이르러서야 일방적인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바로 전체해고자 33명중 지난해 처음 해고된 14명에 한해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그룹인력개발원에서 특별연수를 받게 한뒤 원직복직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그룹인력개발원은 ‘삼청교육대’의 아류작이라도 되는가 보

다.

그러나 노동자의 육체와 정신 모두를 돈 몇푼에 사보겠다는 자본가의 밀도 끝도 없

는 계산은 바로 노동자들의 민주적 절차를 거친 파업으로 깨져버린 것이다.

노조측은 아무리 높은 수준의 임금을 회사측이 제시하더라도 노조의 사활이 걸려있는 해고자복직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다며 해고자 33명전원에 대한 완전복직이 이



워워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왜 해고자 복직문제가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번져 파업으로 확대되어 나갔을까. 그 배후에는 어떠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3당합당의 정국변화를 틈타 현 노조집행부의 핵심간부들을 고소·구속시켜

파업과 골리앗농성을 유도하고, 또다시 파업 주도 간부를 대거 해고시켜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구성하거나 현 집행부를 무력화시키려는 회사측의 음모라는 일설이 그리 과장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사내 노동운동체력을 소탕해 버리겠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협의대상이나 쟁의목적이 될수 없다”며 8월초부터 회사 부근에 병력을 배치하고 사정탐사를 하고 있는 회사측과 당국의 모습을 보면 또 한번의 폭압적인 공권력 투입이 불려올 퍼의 냄새가 더 후각을 자극시킨다.

회사측과 당국은 골리앗이 작년만큼의 투쟁력을 상실했거나 더 큰 투쟁을 해내지 못하리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발을 잡으려고 발질을 쏘아대고 있다. 노동자의 사상·의식이 더 한층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지금, 그들은 울산현대중공업 노동자들뿐만이 아닌 노동계급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결국 자본가와 파쇼정권의 모습은 대다수 노동계급의 한이 서린 독침에 의해 미포만의 석양으로 쓰러져갈 것이다.

대학과 대학교수 통제수단인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사립학교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천국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 동료교수 여러분! 정부는 지난 3월8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였고 임법에고기간이 끝난 7월4일 이후 현재, 그 시행은 국무회의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에 반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명백한 핵심내용은 정부가 대학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의 교수신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되어있어 이는 곧 사립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법령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에서 이 법안이 지닌 문제점들을 널리 알리고 정부당국에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학교원의 임용 및 임용기간은 종래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왔습니다만 급변 개정안에 따르면 그 시행세적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개정안의 개악성을 가장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제를 규정한 정년보장교원 정원제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년에 달할때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교육부장관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당해대학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전체교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교수들의 신분을 침해할 것이요 명백합니다.

셋째 이 개정령은 92년 2월 이후부터 현직 교수·부교수 전체가 정년보장을 위해서 새로이 설치되는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유제를 폐지한다는 미명아래 학문적 업적과 자질을 갖춘 교수들조차 정년보장의 관문을 통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들은 승진을 위해 학교와 정부 당국에 순응해야 하고 동료교수들에게 끊임없는 경쟁의식, 혹은 적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얼마든지 교수사회를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장직선제의 길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조항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 현재 많은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1인의 총장 직선 대신, 반드시 2인 이상 후보를 추천토록 하고 있다.
 2. 이른바 ‘추천위원회’가 총·학장을 간접 선출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1) 교수재임용제는 전면 철폐되어야 합니다.
 - (2) 정년보장교원정원제는 철폐되어야 하고, 교육부가 각 대학의 총교원수를 배정하려는 어떠한 방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 (3) 현직 교수들에 대한 정년보장 자격심사를 강제하는 규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 (4) 총·학장은 대학전체교수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 (5)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민주적으로 즉각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 (6) 비민주적인 교육관계법 역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1991년 7월1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강용태(동아대) 김진균(서울대) 배영동(전북대) 이병기(강원대) 이상희(서울대) 이영수(경기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대, 경기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국제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성심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외국어대, 중앙대, 한신대, 한양대, 홍익대, 항공대, 서울여대, 관동대, 목원대, 청주대, 한남대, 호서대, 상지대, 배재대, 순천향대, 원광대, 조선대, 전주여대, 전북 산업대, 호남대, 전주대, 경남대, 경북산업대, 경성대, 계명대, 대구대, 경산대, 동아대, 부산여대, 부산외대, 영남대, 울산대, 효성여대
전국국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회의
강원대, 강릉대, 경북대, 경상대, 목포대, 부산대, 부산수산대, 서울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9개지회 77개대학